

# 오피니언

## 월/요/광/장

김병식



쌀 한가마니와 보리쌀 한가마니가 있을 때 이를 섞어 혼합미 두가마니로 만드는 일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이를 원래 상대인 순수한 쌀과 보리로 다시 나누는 일은 쉽지 않다.

물과 알콜, 질소와 산소 같은 유체의 경우에는 이 경향성이 더 커진다. 즉 합치는 것은 더 쉽고, 분리하는 더 어려워진다. 더구나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 미지근한 물로 만드는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의 분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자연계에서는 혼합은 쉽고 분리는 어렵다.

지금 나라가 대선 열기로 뜨겁다. 대선 승리를 향하여 세 대통령 후보가 꾀꾀를 계속하고 있다. 대선기도에서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선거공약이다. 공약은 공적 약속이다. 유권자는 이 약속을 믿고 후보와 귀중한 표를 교환한다. 이번 레이스에서 세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우는 공약이 하나 있다. '국민대통합'이다.

그동안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들어왔던 사안으로서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가 매우 크다. 정책의 시의성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라고 곳곳에서 외치며 반대진영의 인물도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 역시 소속당의 이름부터 '민주통합당'이니더 말 할 나위도 없겠거니와 안철수 후보도 "상식의 정치, 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과연 통합은 필요하고 가능한 일인가"고 묻는다.

## 대선평약, 진정한 국민대통합은

합의 정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혁신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라며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이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경제, 외교, 복지, 교육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공약의 밑그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요도가 크다. 그러므로 이 공약의 본질적 내용을 좀 더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왜 물질들의 혼합은 쉽게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을 통합하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지. 진정한 통합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한 현대와 같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

합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과연 통합은 필요하고 가능한 일인가 등이다.

'분리보다 혼합'이 잘 되는, 물질계의 변화 특성은 그 이유가 명백하다. 이견 자연의 법칙이다. 즉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특별한 일을 해 주지 않으면, 모든 변화는 에너지 밀도가 작아지는 쪽으로, 전문적 용어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서 앞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리보다 혼합이 쉽다. 이 경우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변화를 반대 방향인 에너지

상태가 높은 방향, 즉 '분리'하는 쪽으로 유도하면, 물질 상태의 에너지 밀도는 높아지게 된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므로 이 물질계는 당연히 부가가치가 커져 높은 경제성을 갖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렇게 자연변화를 역순환적으로 수행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이득과 성취를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연 순환과 반대 방향인 분리적 성격의 일에 관심을 갖고 매달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와 같은 자본 중심 사회에서, 통합보다는 분리적 생각과 행동에 익숙해지고

마는 이유가 된다. 여기에서 유의하며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성취적 욕망이나 경제적 이익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즉 개인이나 조직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적 사회에서는 혼합, 즉 통합은 당연히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이해 단체인 정당에 의해 추진되는 '국민대통합'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자기중심적 목적을 원하는 사람에게 자연 순환적 사고와 행동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두 '국민대통합'을 원한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통합을 갈구한다. 물 흐르듯이 모두가 하나로 움직일 때 일이 순조롭고,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선출되는 우리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의 약속 뒤면에 숨겨진 이타적 본질을 잘 이해하고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여 이 공약을 꼭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 <초당대 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급식용 정부미에 고독성 농약 사용하다니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된 '에피홍'이 학교급식·군수 납품을 나라미(옛 정부미)에 해충 방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쌀을 출고하면서 한번도 농약잔류검사를 하지 않아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입수한 '농촌진흥청의 정부양곡 매출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정부양곡 매출량은 45만7973t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가공용이 20만8812t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시설용 7만6176t, 군수용 5만78t, 학교급식용 2만502t 등이다.

문제는 나라미가 저장창고에 보관되는 동안 '에피홍'(동물 치사농도 m당 770mg)을 연 1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농약의 주성분은 인화농으로 유엔환경규약의 사용규제 목록에 수록돼 있다. 인화농은 대기중에서 수분과 결합하면 인화수소가스를 발생시키며, 이에 중독될 경우 피로감, 구토, 호흡

중지를 일으킬 정도로 치명적이다.

하지만, 당국은 '에피홍'의 용량과 횟수, 농약잔류검사 등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은 채 학교급식 등으로 납품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해왔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농약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농진청이 지난해 안전성 평가를 통해 에피홍·MB·포스판 등 12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려 했으나 정부가 검역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해 에피홍 등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자 의심스러울 정도다.

수십 년 간 이 농약에 의존된 나라미 학교·군부대에 공급됐는데도 당국이 농약잔류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 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정부는 농약 성분이 장기간 인체에 누적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농약잔류검사는 물론 고독성 농약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정부, 최악의 호남경제 두고만 볼 건가

최근 호남권의 근로장려세제 지급률과 어음부도율, 가계부채 증가율 등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의 근로장려세제 비율은 4%로 서울지방청 1.9%, 중부청 3.0%, 부산청 3.2%, 대구청 3.3% 등 전국 평균치(3%)보다 높다고 한다.

근로장려세제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호남지역이 타지역보다 지원 비율이 높다는 건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 지난 2002년부터 8월까지 호남권 기업 어음부도율은 0.116%로 전국 평균 0.03%의 4배 가까이 됐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5억 원 이상 어음부도율(0.036%)도 전국 평균(0.018%)의 2배에 달했다.

호남권의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46.9%로 전국 평균 37.1%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비은행권의 가계부채가 81.8%나 늘어 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 호남지역 기업, 근로자, 서민 모두 전장에서 가장 영세하고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호남의 낙후와 가난은 물론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호남의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고착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사정권 아래에서 수십 년 동안 자행된 호남 차별은 낙후-가난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차별은 군사정권에 버금 간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정권의 정략적 이유 때문에 특정지역이 차별받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호남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호남을 방치해선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조선시대 문무백관은 중요한 의식에 참가할 때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입었다. 검은색과 금색으로 된 금량관(金梁冠)을 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관의 군복은 다양한 문양을 넣어 화려함이 더해졌다. 반면 일반 백성은 대부분 흰옷을 입었다. '백의(白衣)'는 벼슬하지 않은 사람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 백의종군(白衣從軍)이다.

한류했다. 그는 서울로 압송돼 혹독한 신문을 받은 끝에 백의종군의 명을 받고 풀려났다. 후임인 원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고 전사한 뒤에야 다시 수군(水軍) 총지휘관으로 복직한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 캠프 핵심 인사들의 '백의종군'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실세와 측근들이 국민의 비판을 피하면서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이다.

## 백의종군



강직한 성품 탓에 부침이 심한 관직생활을 했던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은 일생동안 두 차례나 백의종군을 했다. 1587년 두만강 하구인 녹둔도 둔전관으로 국경지대를 지키다가 여진족의 기습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진 것이 그 첫 번째다. 다행히 이듬해 여진족 정벌전에 참전해 전공을 세움으로써 사면됐다.

삼도수군통제사이던 1597년에는 일생에서 가장 큰 곤란을 맞게 된다. 부산에 있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왜군을 공격하라는 국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파직된 것이다. 작전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모함을 받은 것도

부 등 더 핵심적인 인사들이 참여해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의 계급이나 권한을 모두 내놓고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전장에서 나가는 백의종군은 충무공의 사례에서 보듯 불명예가 아니라 더 큰 영광과 명예를 쌓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주시 정치부장 who@kwangju.co.kr

## 법조칼럼



정현

### 눈물을 반짝이게 하는 빛나는 사회를 기대하며

이었다. 요즘은 예전보다 친족간의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주요 사건들로 알 수 있듯이 아직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가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에 더 관심이 있고, 친족간 성폭력 사건은 선정성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친아버지나 의붓아버지가 수년에 걸쳐서 딸을 강간해온 사건, 같은 집에서 살던 사촌 오빠가 초등학생인 사촌동생을 수년에 걸쳐 강간, 추행한 사건, 보호자인 할아버지가 유치원생에 불과하였던 손녀를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성추행한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필자는 절망감, 무력감을 느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이유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를 둘러싼 가족의 반대와 그러한 피해자를 방치해버린 사회 때문이었다.

친아버지를 비롯한 동거친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왔을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을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탈하게 되고, 일탈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사회는 "피해자는 원래 문란하고 거짓

말을 일삼는 문제아였다"고 낙인찍어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담당했던 친족간 성폭력 사건의 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할 무렵에는 이미 사회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었고, 가해자의 할머니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할머니이기도 한 사람이 필자 앞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피해자를 '화냥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았다.

피해자의 지지자가 되어야 할 가족들이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장 파탄범으로 몰아가며 고소취소를 강요하는 일도 허다하고, 이러한 피해자를 장기간 보호하고 양육할 기관이 없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친족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직면하는 위와 같은 현실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던 필자로서 과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보호가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가 심했다. 일개 검사로서는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 때문에(당시에 피해자 가족 전체를 전문기관에 보내서 상담치료를 받게 하

거나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에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보기는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동안 친족간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 마음이 무거웠었다.

미국의 경우, 친족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시스템이 확고하게 정착돼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견고하여 그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겠지만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친족간 성폭력 이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리는 것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 필자는 친아버지로부터 9년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지옥에서 탈출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서술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가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담담히 마주하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저자를 지지해주었던 동료와 상담사들이 있었기에 즉, 저자의 눈물을 반짝이게 해주었던 빛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위의 올바른 이해와 따뜻한 관심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 기고



문상필

### 재원 조정교부금 논의 이대론 안 된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시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광역시 평균 취득세 규모가 5863억 원(인원 천 1만1289명, 대구 5438억, 대전 3410억 등) 규모인 반면 광주시는 2975억 원으로 가장 적어 취득세 70%를 지원한다고 해도 실질 교부액은 타광역시에 비해 많지 않고, 2010년 지방소비세 시행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받아, 도시계획세와 취득부담 등록세 자치구 이관으로 인한 감소액보다 많은 연평균 1180억 원의 시세입이 증가하였다며 시의 주장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1년 정산분을 제외한 재원조정교부금 실제 교부액은 2361억 원으로 교부율을 보통세 22.8%로 조정한다면 2013년 교부예상액 2007억 원에 비해 31억 원이 아닌 354억 원 이상의 감소가 예상된다 주장하며 부속채권 전부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은 광주시와 자치구의 계산이 달라 광주시의 부속채권 보전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였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것이다.

시와 자치구의 갈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광주시는 재원조정교부금 논의의 자치구나 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조례 개정과 입법 에고하였다. 사전 구체적인 논의와 소통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생긴 문제이다. 최근 광주시는 정

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자립도가 낮아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비난하였다. 그런 광주시가 MB정부와 똑같이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자치구와 협의의 한면 없이 일방적으로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교부금이 줄어들면 법정경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구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하는 취지에도 맞지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광주광역시의회>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대발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